

# 에너지 효율 전쟁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세계 경제는 지금 원유와 원자재 가격의 폭등, 농산물 가격의 급등, 그리고 미국 달러 대 자국 환율의 상승 등 이른바 3高의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다. 그러나 애그플레이션(Agflation: Agriculture and Inflation)이라는 신조어가 등장 할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3고 중에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다. 이제는 유가가 100불을 넘었다고 해도 이미 한국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대담해졌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가격 상승의 진원지는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한 일본의 대응은 알미울 정도로 밋다. 밖으로는 자원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자원을 개발하거나 확보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안으로는 에너지 절약은 물론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면서도 기업들이나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은 선포 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에 목숨을 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뿐 만이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도 일정 수준의 자동차 연비를 달성해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은 자동차에 이산화탄소 등급제를 시행하고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고효율 제품이 판매될 때 판매세를 면제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심지어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면 소득세에서 감면해 준다. 중동의 아랍 에미리트나 중국의 상해 시는 아예 도시 자체를 탄소제로 도시로 만들려는 계획을 독일의 발전사업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넘어 에너지 제로'로 가려는 야심 찬 계획인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효율을 둘러싼 전쟁의 와중에 한국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에너지효율관리제도이다. 이 제도에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그리고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이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은 가장 나중에 도입되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고효율 인증제도와 등급제도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우선 형광램프, 형광램프 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4개 품목이 양 제도에 중복되어 정부의

글 · 김정인 교수  
중앙대학교 산업경제과

지원을 받고 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절감의 효과가 전기보다는 열기에서 더욱 많은데 전기 기기 중심의 지원이 지금까지 되어왔다. 물론 최근부터는 열기기에 대한 품목이 포함되고는 있지만 조속히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려금 지원이 한전 수요관리사업의 일환으로서 전력을 소비하는 품목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등급제도 이외에 최소효율기준에 대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특히 일부 품목만 대상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단 고효율 인증 기기에 포함이 되면 보급률이 낮아도, 여전히 지원을 받는다. 철 밥통인 셈이다.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키는 면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만큼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시대에 맞지 않거나, 그 효과가 떨어지는 제품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효율이 높은 품목을 새로이 추가하는 것이 시장

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없거나 에너지 효율 상승효과가 없는 것

도 시장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 그것이 시장의 원리이다. 국제 시장

은 아주 냉혹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제위기를 통하여 경험 했다. 그때는 금융

위기로 처한 위기였지만 미래는 에너지 위기로

올 것이다. 한국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말은 “미

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일 것이다.

